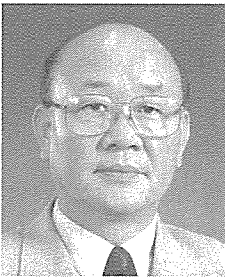


“남북 화해의 새로운 시대 21세기는 한민족 과학기술로”

지난해 6월 15일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막된
신 남북시대를 맞아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남북 교류사업에 앞장서야 하겠다.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협력체제가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보완적 기술교류,
상호존중의 기술교류, 상호이익의 기술교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蘇大和
(명지대 전자공학과 교수)

남북 화해의 새 시대, 새 한민족 시대,
21세기는 한민족과학기술로!!

2001년의 새 아침에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의 힘찬 구호들이다.

새해 벽두부터 겨울단비가 오더니, 새 하얀 서설이 내리다가 모처럼 겨울맛을 흠뻑 느낄 수 있는 큰 눈이 내리는 풍년을 이루었다. 평양과 부산에서는 각각 50년만의 한파요, 보기 드문 흑한과 대설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디선가 따스한 훈풍이 불어와 줄 것만 같은 기대감 속에 오랜만의 겨울

풍경도 매섭던 IMF 한파와 함께 지워 버리고 벌써 포근함을 느껴보고 싶은 것이 우리네 심정인가보다.

수년동안 지구 전체가 온난화현상에 휩싸이더니, 그 원흉인 엘니뇨(El nino)가 주춤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다. 오랜만에 느껴 본 하얀 눈 덮인 겨울 정취도 남과 북의 찬바람, 더운 바람이 서로 어우러져 만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지난 해 6월15일, 꼭 반세기만에 그토록 어렵게만 여겨져 왔던 남북 정상회담이 따스한 남풍을 타고 평양으로 올라가 그 곳의 찬바람을 사르르 녹여, 높다란 분단의 장벽을 사뿐히 내려 앉히고 금강산도, 한라산도, 문화예술교류며, 경제협력과 함께 북으로 또 남으로 오르내리게 하더니, 드디어 지난 1월에는 큰 눈구름이 몰려와 이 땅에 희망과 풍년을 약속하듯 큰 눈을 내려주었던 모양이다.

남북교류, 과학기술인 앞장을

금년 1월 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동안 남북협력사업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들을 열거하시면서, “이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차례가 되었다.”며 “과총이 선두에 서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문과 함께 막중한 과업을 지정해 주셨다.

그렇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인들이 앞장 설 차례다. 분단 반세기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밀려 가다리고 있었던가! 그러나 서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비이데올로기적이고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내야 할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하겠다. 굳이 목적과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상호이익이 전제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위한 협력 방법과 순서, 대상과 역할 등을 엄격히 선별하여 추진, 수행해야 하겠

다. 우리는 자본주의 생활방식으로부터 사회주의 체제의 기술도 경험해 보았다. 그래서 중국의 기초과학기술도 구 소련의 첨단기술도 만나보았고, 그들을 접목시켜 새로운 신기술도 만들어냈다.

북한의 과학기술이 구 소련과 중국 기술의 바탕 위에서 구축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며, 북녘동포 특유의 바탕기술을 이룩했음은 물론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기초과학의 견고함에 비추어 응용기술이 낙후함은 주지된 사실로써, 북한의 기초과학기술력과 자원의 바탕 위에 우리의 응용과학기술력과 경제력, 경영능력을 접목시켜 협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상호이익을 위한 이상적인 짜임새 임에 틀림없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열어 '대립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신 남북시대'를 개막하였고, 북한은 경제성장의 긴요함을 외치며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로 진격로를 열어가자'라는 내용의 2001년 신년사를 '당보', '군보', '청년보' 등 3개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의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채건'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으로 지표를 설정할 만큼, 경제건설에 '현대적 기술'을 갈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경제력의 협력 필요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바로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사업에서 과학기술 협력사업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소외된 듯한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해 농수산물 반입이나 의류 등의 단순 임가공 부문으로부터 경협 대상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및 핵심기간산업으로 전이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전담기구는 민간단체 주체로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한·중, 한·러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들을 거울삼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긴요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남북 협력체제가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협력방안은 상호주의원칙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서로의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호보완적 기술교류, 상호존중의 기술교류, 상호이익의 기술교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은 먼저 민간생산 기술교류로부터 기간중점 기술교류사업으로, 핵심인력 중심의 교류로부터 핵심기술 중심의 교류사업으로 점차 확대하여 반세기 동안의 심각한 과학기술교육

및 문화의 이질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과학문명의 민족사회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기초 위에 기술과 경제발전에 유익한 사안부터 선택되어야 하며, 과학기술교육과 인력배양협력체계 구축, 공동기술체계 및 통일적 시스템 구축, 기술인의 교류협력, 청소년 및 대학생의 과학캠프 교환, 공동연구 활성화 및 과학자 연구교환방문, 기술의 자본화 구축협력, 고유기술 개발협력, 자원 및 자원활용기술의 교류확대, 대표기관 정례회의 등의 협력사업이 기초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과학기술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관한 각급 대북 행정지원창구를 통합하여 대민 교류지원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중앙 정부(과학기술부)에 전담업무 수행/지원 부서를 두어 대민 사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사업추진 전담기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관련 민간단체를 주체로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일원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한국학술단체의 사업활동을 총괄 지원하고 있는 과총에서 현재의 전담 부서를 개편, 강화하여 총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상해를 방문하여 중국식 시장경제개혁의 성공을 극구 찬양하며, 마치 이를 일괄인도(turn-key)방식으로 도입이라도 하려는 듯 깊은 관심을 표명한 일은 새로운 모습을 시사해 주며, 새해 벽두에 '신 사고론'을 주창하면서 이를 고위층 간부들에게 강조한 것이나, 상해지역 방문시 '상해는 천지

개벽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놀라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것이 북한사회의 경제발전 모델에 가장 적합한 것인 양 큰 관심을 보인 것 등은 분명 북한의 지도노선이 개방과 개혁을 향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폐쇄사회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혈맹관계의 중국 도움이 긴급하다는 요청도 하였다. 또한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기술인력과 저임금 노동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상호보완적 협력수단으로 서로의 입장과 품격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인력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교류협력이 동반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서로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식이 교류 확산되면서 평화와 공존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인식 확대되어 남북시민의 평화통일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만난 어느 탈북 소년이 "중국 돈 1만원(한화 약 140만원)만 벌면 다시 돌아가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살고 싶다."며 고개를 떨구던 모습이 생각난다.

특수계층으로 구성된 평양시민의 생활수준과 시골농촌의 주민생활 수준을 혼돈하면 안될 것이다. 얼마 전에 독일의 어느 용기있는 의료봉사자(의사)

가 판문점을 통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폭로했던 시민정신이 높이 보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인가!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는 일부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이룩될 수 있는 일부터 국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야 하며,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북한사회에 어떤 이익과 영향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하는 전략적 사고 위에서 접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3국 통한 소극적 교류 탈피

남북 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1990. 4월 창립/과총내 상설기구)의 발족 이래, 10여년 동안 기대했던 남북 협력사업의 소강, 담보상태로부터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의 전망은 급진전되고 있으나, 그동안 과학기술협력사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동안의 소극적 지원자세를 벗고 남북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수립하여 수임기관



1991년 8월 과총 주최로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해방 이후 최초로 북한과학기술자 45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남북과학기술자대회'에서 북한 조선과학기술총연맹 허병진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의 역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수임기관으로써의 과총은 민간차원의 독자사업으로 지정, 지원받은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책임지고 활성화시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는 제3국을 통한 우회적, 소극적 교류수단을 탈피하고 남북 민간차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추진방법으로 남북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학술과 기술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산의 아픔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며, 금년 6월부터 계획되어있는 '6·15 공동선언 축하행사'에서도 최소한 남북 과학인의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남북 과학기술협력과 통일방안 모색을 위해 다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④7